

“국산맥주도 ‘4캔에 만원’ 가능해진다”…주류세 개편

중량세 도입…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역차별 문제 해소
정부, 맥주 세수 300억 포기하고 2년간 세율 20% 감경키로
“캔맥주 세금 아끼기 때문에 생맥주 세금 부담 여력 충분해”



내년 1월부터 캠맥주에 붙는 세금은 줄어들지만 생맥주의 경우는 늘어날 전망이다. 브랜드별로 다른 지만 일부 수입 맥주의 세부담도 확대된다. 정부는 생맥주의 소비자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끊어두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맥주에 리터(1당) 830.3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알코올 도수·양 기준 과세)를 전격 도입하되 생맥주에 한해 향후 2년간 세율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적

용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편안을 9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그간 지적됐던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사이의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가세(원가 기준 과세) 방식에선 수입 맥주의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각종 이윤을 합친 출고가를 기준으로 삼던 국산 맥주보다 세금을 오히려 덜 내왔다.

결국 종량세 전환은 수입 맥주와의 경쟁에서 차츰 밀리는 국산 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내 캠맥주의 세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현재 국내 3사(OB·하이트·롯데)의 주세는 11당 1121원꼴이다. 11당 830.3원이 적용되면 지금보다 26% 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세부담으로 보더라도 캠맥주는 23.6%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국산 캠맥주의 가격 인하 여력도 생기는 셈이다.

병맥주와 페트 맥주는 각각 1.8%, 3.1%씩 세부담이 높아진다.

문제는 애초에 출고가가 캔·병 맥주보다 낮아 종가세 체계에서 더 유리했던 생맥주다.

당장 세부담이 크게 늘면 소비자가격도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맥주 과세 체계 개편으로 전년 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를 감수하고서도 ‘한시적 세율 경감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세율을 둑어두게 되면 생맥주의 11당 세부담은 현행 815원 수준에서 1022원으로 25.4% 가량 늘어나는 수준에서 형성된다.

맥주 회사가 보통 캠맥주와 생맥주를 동시에 만들어 피는 만큼 당장 맥주 가격 전반의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기재부는 “캠맥주의 허락분과 생맥주의 상승분이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입장에선 한쪽에서 세금을 아끼는 만큼 다른 한쪽에서 부담 여력을 늘릴 수 있단 이야기다.

특히 최근에는 종이 즐겨 찾는 수제 맥주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의 생맥주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수제맥주 업체는 지금도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앞선 4일 사전 브리핑에서 “11당 평균적으로 78원 가량의 세부담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경영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량세 도입과 더불어 크게 주목 받았던 수입 캠맥주 가격도 현수준

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이후 브랜드별로 세부담 변화가 다른 흐름을 보였다.

하이네켄, 스텔라 등 저렴한 맥주는 세부담이 오르지만 기린, 기네스 등 비싼 맥주는 오히려 전보다 줄어드는 양상이다.

특히 수입 맥주의 40% 가량은 국내 주류 업체들이 수입해 판다. 김 실장은 “국내 맥주 3사들은 이번 개편으로 생맥주 세부담 경감의 이익을 보는 곳들”이라며 “수입 맥주의 세부담이 올라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긴다 해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회사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 과정에서의 경쟁 상황을 감안한다

면 종량세 도입 이후에도 소위 ‘4캔에 만원’ 상품은 계속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맥주 외에 탁주(마걸리)에도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탁주의 개정 세율은 2017년과 지난해 세율의 평균값인 11당 41.7원으로 설정됐다. 탁주 업계는 애초부터 종량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 변화가 크지 않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국내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다양한 고품질 맥주·탁주의 개발로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뉴스

수제맥주도 4캔 1만원 가능할까

비쌌던 수제맥주, 가격경쟁력 확보…다양화

정부의 이번 주세개편은 편의점의 ‘4캔 1만원’ 수입맥주가 화살을 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세체계가 바뀌더라도 이 편익은 그대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국산맥주나 수제 맥주는 가격이 내려가거나 다양화될 가능성도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유통업계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약 50년 만에 주세법을 개편하기로 한 데에는



그간 국산·수입맥주간 과세체계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마케팅 비용 같은 판매관리비, 업체 이윤까지 고려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신고한 수입가에 관세만 붙여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가격에 따라 세를 부담하는 ‘종가세’에서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입맥주와 국산 맥주 간 가격에 따른 세금 차이가 없어지면서 같은 양其实是 출발선상

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4캔이 1만원이던 수입 맥주 가격에는 변화가 있을까? 같은 궁금증에는 정부와 유통업계 모두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다.

종량세로 전환되면 수입맥주 전체적으로는 세 부담이 늘겠지만 수입맥주 종류별로도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해서다.

또 개별 브랜드 간, 대형마트·편의점 등 소매점 간 경쟁 등 국내 맥주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감안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편의점 등에서 맥주는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기도 하

지만 일종의 미끼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류 및 유통업계가 미진을 조금 줄이더라도 현행 만원에 4캔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성이 크다.

국내 제조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이 개편되는 만큼 수입 및 국산 맥주 간 판매비율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로는 편의점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대략 국산이 40% 수입이 60%다.

이번 주세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국내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수제맥주는 대규모 주류회사에 비해 출고가가 높아 유통업체에서 설 자리가 적었다.

현재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수제맥주도 3캔 990원이라는 가격으로 수입맥주에 비해 비싼 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제맥주가 비교적 비싼 편이라 이번 개편으로 확실히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허들이 낮아진 민족 수제맥주의 판매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고품질의 맥주가 개발되는 등 주류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고품질 주류로 선택권이 확대돼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